

의안 번호	1956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1.(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7. 11.(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7. 29.(금)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안 제33조)
-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안 제34조)
- 신고포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안 제35조)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옥범)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